

아세안·중국 경제관계의 심화와 전망

오윤아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yaoh@kiep.go.kr, Tel: 044-414-1201)

신민이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mlshin@kiep.go.kr, Tel: 044-414-1154)

김미림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mlkim@kiep.go.kr, Tel: 044-414-1096)

정주영 (前)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차 례

1. 검토 배경
2. 동남아 정세 변화
3. 중국의 동남아 전략
4. 동남아·중국 경제관계 현황과 성과
5. 결론과 시사점

주요 내용

-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동남아 대외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2016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로 아세안, 중국,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 출범과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으로 역내 외교안보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음.
 - 동남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있어서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은 동남아와 보다 긴밀한 외교 및 경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동남아의 최대 교역파트너인 중국은 최근 역내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고 비전통적 원조를 통해 동남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 수출입상대국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부문에서는 전통적으로 미미했으나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양지역간 경제관계 심화는 교역보다는 투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투자와 원조를 포괄하는 광의의 "경제협력"의 개념으로 개발협력을 접근하고 있으며, 공공차관과 상업차관, 합작투자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거대인프라 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음.
-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힘의 공백 상태에서 중국이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 그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및 FDI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의 아시아 정책 후퇴로 중국견제가 약화될 수 있음.
 - 동남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면서도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여 대부분 균형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한국은 급변하는 동남아 역내의 정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별국가의 입장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진출 확대가 한국의 동남아 교역과 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되었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그리고 2012년 중국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G2 시대의 도래로 동남아에서 중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긴장 국면이 조성되었음.¹⁾

- 중국은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막강한 경제력을 세계강국으로의 부상에 이용하고자 하며, 이는 최근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전략지역인 동남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동남아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며 투자와 경제협력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동남아 각국에 절실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12년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통해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필리핀은 2014년 미국과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맺는 한편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는 등 중국과 갈등을 빚었음.

■ 2016년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 출범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돌출변수로 인해 동남아 역내 외교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필리핀은 2016년 6월 말 두테르테 정부 출범이후 ‘친중탈미’라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내세우며 대미, 대중 외교노선을 급격히 수정하고 있음.
-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보호무역주의와 아시아 회귀 정책 후퇴로 이어질 경우 힘의 공백으로 인한 동아시아 외교안보 및 통상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분간 불확실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모전단의 군사훈련, 인공섬 건설과 무기수송을 감행하고 있음.
-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이 불분명한 점이 많아 아시아와 관련된 통상 및 안보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본고에서는 최근 필리핀 정권교체 이후 동남아 정세변화와 동남아-중국 경제관계를 검토한 후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함.

- 동남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는 두테르테 정부의 외교정책 변화와 이와 연관된 필리핀-중국 경제관계를 검토함.
- 동남아와 중국의 교역, 투자, 개발협력 관계를 분석하여 동남아의 중국의존성의 현황과 향후 관계심화 가능성을 살펴봄.
-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역내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함.

1) 이 글에서는 동남아와 아세안(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지역을 지칭하는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함.

2. 동남아 정세 변화

가. 남중국해 분쟁 상황

■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7월 12일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에 승소 판결을 내림.

- 2013년 1월, 필리핀이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²⁾을 주장하는 스카보러(Scarborough)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에 중국이 함선을 파견하여 점거하자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해 중국을 PCA에 제소함.³⁾
- PCA는 2016년 7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주장해온 구단선⁴⁾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함.
 - 중국은 중재재판 자체를 거부해왔으며, 판결결과에 대해서도 즉각 반발하였고, PCA 판결 전후 대대적인 국내 외적 여론전을 펼치기도 함.
 - 판결 직전 취임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임자 아키노 대통령과 달리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중국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역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베트남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은 자제함.⁵⁾

표 1. 남중국해 분쟁과 최근 중-필리핀 관계 주요사건

일자	주요 사안
2012.	스카보로 암초 부근 중국과 필리핀 함선 대치
2013. 1.	필리핀, 중국을 PCA에 제소
2014	미국-필리핀 상호방위협정 체결
2015	미국, 중국 인공섬에 12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 개시
2016. 2.	두테르테 후보, 선거유세 중 당선되면 남중국해 분쟁 해결 위해 중국과 양자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2016. 6. 30	두테르테 필리핀 16대 대통령 취임
2016. 7. 12	PCA 필리핀 승소판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전면 부정
2016. 8. 25	두테르테, PCA의 판결 결과를 존중해야한다고 발언
2016. 9. 29	두테르테 2017년부터 미국-필리핀 합동군사훈련 중단 시사

2)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구역.

3) Sienho Yee(2014),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The Philippines v. China): Potential Jurisdictional Obstacles or Objection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p. 663-739.

4)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그은 9개의 점선을 말하며 남중국해 전역의 90%를 차지함. 중국 측은 한나라 시대의 문헌과, 명나라 시절 정화의 남해원정 기록 등을 구단선의 근거로 주장해 왔음.

5) "South China Sea Dispute Looms Over Philippine Elections." *The Wall Street Journal*. (2016. 3. 12)

표 1. 계속

일자	주요 사안
2016. 10. 18~21	두테르테, 중국 국민방문, 20일 정상회담, 중국, 240억 달러 경제협력 약속
2016. 10. 25	두테르테, PCA의 판결이 구속력이 있다고 발언
2016. 10월 말	중국, 분쟁지역인 스카보로 암초 주변에서 필리핀 어선 조업 허용
2016. 10. 26	두테르테, 일본 방문하여 아베총리와 정상회담 일본은 필리핀에 대형순시선 2척을 공여하고, 해상자위대의 연습기 TC90를 대여 일본은 필리핀 농업개발을 위한 약 50억엔의 차관 제공 약속

자료: 저자 정리.

나. 필리핀 정권교체와 외교노선 변화

■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나 2016년 6월 두테르테 정부 출범 이후 대미, 대중 외교노선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있음.⁶⁾

- 두테르테는 출신상 친미성향이 강한 기존정치엘리트집단과 성향이 다르며, 신정부가 대대적으로 수행 중인 마약 및 부패소탕 작전의 인권침해 문제로 미국 및 서방과 갈등을 빚고 있음.
- 2016년 9월 라오스 아세안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언급할 것이라는 소식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반감을 표출하며 정상회담이 취소됨.⁷⁾
- 두테르테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합동 순찰과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미군의 필리핀 재주둔을 허용하는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의 폐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미국과 대립하고 있음.⁸⁾
- 두테르테는 취임 직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으며 아세안 국가를 제외한 첫 해외 순방으로 2016년 10월 18~21일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필리핀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함.⁹⁾
- 중국은 필리핀에 150억 달러 투자와 90억 달러 차관 제공 등 총 240억 달러(약 2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을 약속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추후 양자협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함.¹⁰⁾
- 양국 정상은 필리핀 고속철 사업을 비롯한 인프라, 에너지, 미디어, 검역, 관광, 마약 퇴치, 금융, 통신, 해양 경찰, 농업 등 총 13건의 협정문에 서명하였으며, 필리핀과 중국 기업 간에 112 억 달러 상당의 철도, 항만, 에너지 및 광업 관련 예비 협정이 체결됨.

6)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는 2016년 10월 31일 일주일간 중국을 국민 방문하고 중국과 경제, 군사 등 전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국방·철도·에너지 등 28개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 특히 말레이시아 동부철도 건설 사업을 포함한 14건(총 39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정도 체결하였음.

7) "Obama Nixes Meeting After Rodrigo Duterte Lobs an Insult," *The Wall Street Journal*(2016. 9. 6).

8) "Duterte Wants American Troops to Leave Mindanao," *Inquirer*(2016. 9. 13).

9) "Itemized List of PH Projects Covered by China's \$15-B Investment Pledges to Duterte," *Inquirer*(2016. 10. 23).

10) 또한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의 틀 내에서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Meets Xi Jinping: First Takeaways," *The Diplomat*(2016. 10. 21)

-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 협상원칙은 분쟁 당사자 해결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 역외세력 및 다자적 접근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하여, 필리핀이 중국의 양자협상제안에 동의한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큰 소득임.
- 중국은 양자협상에 동의하는 상대국에게 분쟁지역 접근 및 자원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실제 중국은 두테르테 방문 직후인 10월 말 스카보로 암초 주변에서 필리핀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였음.

■ 두테르테 정부는 현재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전략은 국내외적으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음.

- 두테르테는 중국방문 직후 일본을 방문하여 남부 민다나오 농업개발을 위한 50억 엔차관과 대형순시선 2척 공여와 연습기 대여 등을 약속받는 등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두테르테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대체로 매우 높은 편으로, 2016년 9월 조사에서 신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66%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성과에 만족도가 75%를 기록함.¹¹⁾
- 두테르테에 대한 개인적 지지도가 73%로 대단히 높고, 지지기반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높다는 점에서 두테르테의 비전통적 외교에 대한 국내적 지지기반은 상당히 공고한 것으로 보임.¹²⁾
- 그러나 영유권 문제는 위협도가 높은 사안으로, 신정부가 중국에 굴종한다고 비춰질 경우 대대적인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며, 두테르테 자신도 필리핀 영토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 필리핀이 2016년 정권교체와 함께 보인 대중국 정책변화의 원인으로 리더십 교체라는 정치적 요인과 함께 향후 중국투자 성장가능성이라는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대표적인 내수중심 경제이고 수출의존도가 낮아 최근 중국경제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있음.
- 중국 수출비중은 2011년 이후 큰 증가 없이 11~13%대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의 필리핀 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임.
- 필리핀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해외송금과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PO) 산업은 모두 미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11) 마약근절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78%로 높고, 국가영토수호 부문도 만족도 역시 53%를 기록하였으나 외교관계 항목은 39%로 이전 정권 대비 하락 하는 모습을 보임. Social Weather Station(2016a), "Third Quarter 2016 Social Weather Survey"(SWS Media Release 19 November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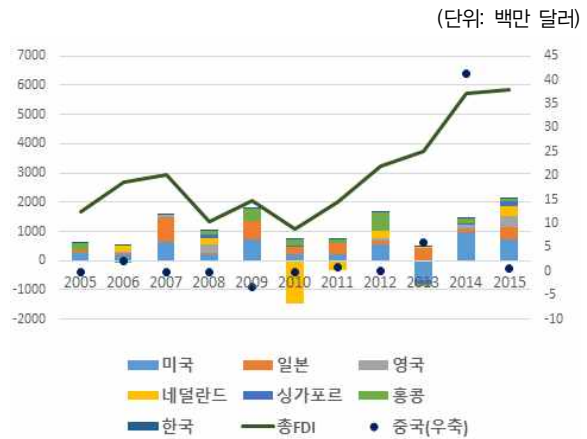
12) Social Weather Station(2016b), "Fourth Quarter 2016 Social Weather Survey"(SWS Media Release 24 December 2016).

그림 1. 필리핀 수출대상국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검색일: 2016. 1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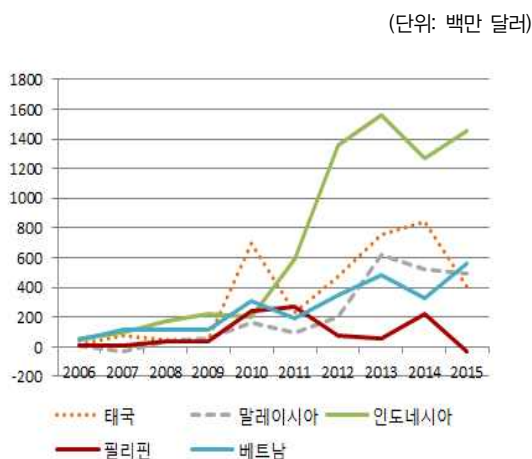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필리핀 FDI 유입추이



자료: 필리핀중앙은행(<http://www.bsp.gov.ph>).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필리핀과 비교 가능한 동남아 주요국에 대한 중국의 FDI가 크게 늘어났으나 필리핀에서는 저조하였으며, 이는 반대로 향후 필리핀에서 중국투자의 성장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함.
- o 2013~2015년 필리핀은 약 3억 달러의 중국투자를 유지하였는데, 유사한 중저위소득국인 베트남은 같은 기간 필리핀의 5.5배, 인도네시아는 17배의 중국FDI를 유치하였음.
- 또한 필리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프라 건설의 경우 과거 아키노 정부 시절 PPP 방식 인프라개발의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하여 중국이 제시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제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3. 필리핀과 주변국 중국FDI 유입추이



자료: CEIC(검색일: 2016. 11. 16).

그림 4. 필리핀과 주변국 중국FDI 유입비교(2013~2015년)



자료: CEIC(검색일: 2016. 11. 16).

3. 중국의 동남아 전략

가. 기본방향과 최근 동향

■ 동남아가 ‘일대일로’ 구상의 한 축인 ‘21세기 해상실크로드’¹³⁾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은 동남아와 보다 긴밀한 외교 및 경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안한 이후 중국-동남아 경제협력논의는 몇 가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일대일로의 틀로 흡수 및 재편되고 있음.
- 중국은 동남아 지역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다자성격의 중·아세안 정상회의, 중·아세안 엑스포 등을 활용하고 있는 한편¹⁴⁾ 동남아 국가별 양자협력관계를 일대일로의 틀 안에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임.
 - 2015년 11월 개최된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 정상들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하기로 하였고¹⁵⁾, 2016년 중·아세안 엑스포(CAEXPO)의 주제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와 긴밀한 중·아세안 운명공동체의 건설”이었음.
 - 2016년 9월 중국과 인도네시아 정상간 양자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계획과 자국의 해양강국 비전의 연계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힘.
 - 2016년 6월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프놈펜에 ‘21세기 해상실크로드연구센터(CMSRRC)’를 설립하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임.

■ 중국은 동남아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중국 남부 쿤밍에서 동남아 주요국을 잇는 ‘쿤밍-싱가포르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 노선 중 라오스를 지나는 중부선 건설에 집중하고 있음.

- ‘쿤밍-싱가포르 철도’연결은 중국정부의 12차 경제개발계획(2006~11년)에 포함되었으며 광시 지방정부는 이를 발전시켜 난닝-싱가포르 경제회랑 등의 개발을 구상하기도 하였음.
 - 중국 쿤밍-방콕-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를 연결하며, 이 중에서 쿤밍과 방콕 간 연결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따라 동부노선, 중부노선, 서부노선으로 분류됨.¹⁶⁾
- 중국 쿤밍에서 시작되는 중국 내부구간 철로건설은 진행 중이며, 중국은 동남아 구간에서는 중국과 관계가 꺾기 어려운 베트남의 동부노선과 미얀마 서부노선 보다는 태국을 지나는 중부노선에 집중하고 있음.

13)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에서 지중해 그리스까지 연결하며, 중국과 해상실크로드에 인접한 국가들의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함.

14) 「중국의 21세기 해상실크로 구상추진 동향과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2015), 18-4, p.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월 27일)

15) 중·아세안 정상선언문(2015), “Chairman’s Statement of the 18th ASEAN-China Summit.” (November 21), <http://www.asean.org/wp-content/uploads/2015/12/Chairmans-Statement-of-the-18th-ASEAN-China-Summit-Final.pdf>(검색일: 2016. 11. 25)

16) 각 노선별 해당 국가를 살펴보면 △ 동부노선은 쿤밍-베트남-캄보디아-태국 △ 중부노선은 쿤밍-라오스-방콕 △ 서부노선은 쿤밍-미얀마-방콕 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구간 350km 길이 고속철도 사업은 말·싱 정부가 2017년 초 발주 및 2026년 완공이 계획하고 있어, 향후 ‘쿤밍-싱가포르 철도’까지 이어지는 노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됨.

- 420km에 달하는 중국 쿤밍-비엔티엔 구간은 2015년 12월 착공했으며, 중국과 라오스가 공사비용의 70%, 30%를 각각 투자하고 중국이 라오스에 저리차관을 제공하기로 함.¹⁷⁾
- 중국과 태국은 2016년 3월 태국내 방콕-나콘라차시마 구간(250km)에 대해서 태국정부가 단독투자하고¹⁸⁾ 중국기업이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¹⁹⁾

그림 5. 쿤밍-싱가포르 철도 주요 노선계획



주: 해당 노선그림은 주요 거점도시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연결함.
자료: 저자 작성.

■ 동남아에 특정한 시진핑 정부의 협력의제는 2013년 10월 리커창 총리가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2+7 협력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이며, △전략적 상호신뢰관계(strategic trust) 구축과 △경제협력이라는 두 가지 기본방향 아래 다음의 7가지 협력방안을 추진하고자 함.²⁰⁾

- ① 중아세안 우호협력조약 체결 ② 중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③ RCEP 논의 심화 ④ 합동 인프라 프로젝트 촉진 ⑤ 지역금융협력 강화 ⑥ 해양협력 강화 ⑦ 중아세안 간 문화, 과학 및 환경협력 증진.²¹⁾
-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16년 9월 제 19차 중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주변외교에서 아세안은 중요하며, 국제 및 지역이슈에 대해 아세안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 발언.²²⁾
- 중국의 동남아정책의 목표는 (1) 중국의 세계강국 부상을 위한 안보위협 해소와 주변국 지지 확보 (2) 국가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국의 경제발전 (3) 광시, 윈난성 등 접경지역의 안정과 경제개발에 있음.
- 중아세안 경제협력은 2004년 중아세안 엑스포, 2005년 중아세안 FTA 발효, 2009년 중아세안 투자협력기금 조성 등을 통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중아세안 FTA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되었음.

17) Simon Webb(2016), “China, Laos say rail project to go ahead, pending environment study,” *Reuters*. (July 29)

18) “Thais to Fund First Phase of Thailand-China Railway Projec.” *Straits Times*(2016. 3. 24)

19) 태국 전체구간(농카이-방콕)에 대해서는 공사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20) Justyna Szczudlik-Tatar(2013), “China’s New Silk Road Diplomacy,” PISM Policy Paper No. 34(82), p. 4.

21) Justyna Szczudlik-Tatar(2013), “China’s New Silk Road Diplomacy,” PISM Policy Paper No. 34(82), p. 4.

22) 리커창 연설문(2016), “Remarks at the 19th China-ASEAN Summit to Commemorate the 25th Anniversary of China-ASEAN Dialogue Relations.” (September 9), http://english.gov.cn/premier/speeches/2016/09/09/content_281475437552250.htm(검색일: 2016. 11. 25)

표 2. 중국·아세안 경제협력 주요 연표

2004년	제1차 중·아세안 엑스포 개최
2005년	중·아세안 상품협정 발효
2007년	중·아세안 서비스협정 발효
2009년	중·싱가포르 FTA 발효, 중·아세안 투자협력기금(250억 달러 규모) 조성 발표
2010년	중·아세안 투자 협정 발효
2011년	RCEP 협상 개시
2013년	중·아세안 정상회의 2013년 “2+7 협력 프레임워크” 제안, 중·아세안 투자협력펀드 창설
2015년	중·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합의
	제1차 란창-메콩 협력 외교장관 회의 개최

자료: 저자 정리.

나. 중국 지방정부 참여와 중국·동남아 지역협력

■ 중국은 접경지역의 지방정부가 동남아협력의 주요 창구역할을 수행하며, 최근 일대일로가 기존의 지역협력 메커니즘을 통합 및 대체하는 추세에서도 중국 주도로 새로운 독자적 지역협력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경향을 보임.

- 중국의 동남아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동남아 접경지역의 안정과 개발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동남아협력을 추진하는 특징을 보임.
- 동남아와 접경한 윈난성은 중국지방 31개 성 중 1인당 소득 30위, 광시는 26위를 차지하며,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1차산업과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는 저개발지역임.
- 동남아 접경지역 중심의 중국과 동남아 협력메커니즘 중 광시의 ‘중·아세안 엑스포’와 윈난성 중심의 ‘란창-메콩 협력 메커니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남중국해에 위치한 하이난성도 동남아 협력의 창구로 부상하고자 하며, 최근 내륙지역인 쓰촨성, 깐수성 등도 동남아 경제협력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추세임.

■ 중·아세안 엑스포(CAEXPO)는 중·아세안 협력의 거점인 광시 좡족자치구의 난닝시에서 열리는 중국과 아세안 공동의 최대 무역투자행사이자 아세안 최대의 무역박람회이기도 함.

- 중국 상무부, 아세안 10개국 정부, 아세안사무국이 공동주최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종합 상품박람회이며, 2004년 이후 매년 9월 개최하고 있고 중국-아세안 FTA 활용을 위한 무역투자 행사의 성격도 가짐.
- 양국 무역활성화와 상호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역량 강화, 장비제조, 자원개발 및 환경보호, 첨단기술개발, 국경간 산업단지 개발, 금융분야 등에서 협력 강화를 도모함.
- 광시는 중국 서남부 지역발전의 전략거점이자 서쪽으로 베트남과 접경지역이며, 남쪽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통하는 중국 서부지역의 유일한 연해 지역으로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의 협력의 주요 거점임.

- 중국과 아세안은 2016년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광시에 역내 해운물류 자원의 통합과 정보교류를 위한 중-아세안 해운물류정보센터를 설립하기로 함.²³⁾

■ 란창-메콩(란메이) 협력메커니즘은 중국 주도의 새로운 메콩지역 협력체로서 유사한 성격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 GMS 프로그램(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과 별도로 중국이 자신이 주도하는 대륙부 동남아 협력이니셔티브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됨.

- 란창-메콩 협력은 중국과 동남아 대륙부인 메콩 유역 5개국²⁴⁾이 참여한 지역협력체로서 주요 협력 분야는 연계성 증진을 위한 ① 인프라 개발 ② 생산성 향상 ③ 국경간 특별경제구역 및 산업단지 건설 ④ 수자원 개발 및 보존 ⑤ 농업개발 및 빈곤감소이며, 경제와 함께 정치안보이슈도 다루기로 함.
- 2015년 11월 중국 윈난성 징홍시에서 제1차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16년 3월 중국 하이난성 산야에서 중국-태국 공동 주재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됨.
 - 제1차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정치·안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사회 및 인적 교류를 3대 우선협력분야로 채택함.
 - 제1차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인프라 구축, 생산성 향상을 위해 차관 15억 달러, 신용대출 100억 달러, 빈곤 완화를 위해 원조 2억 달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추가로 메콩협력기금 설립에 합의하며 5년간 3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함.
- 기존의 GMS 프로그램이 일본의 영향이 강한 ADB 주도 사업이라는 점에서 란창-메콩 협력은 중국의 주도권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 접경지역 중국-동남아 협력메커니즘 비교

	중국-아세안 엑스포	란창-메콩 협력메커니즘
개요	광시 장족자치구 난닝시 개최 중국 정부, 동남아시아 10개국 정부, 아세안 사무국 공동 주최	중국, 메콩 유역 5개국(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공동참여 지역협력체
연혁	2004년 이후 매년 9월 개최 2016년 주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과 긴밀한 중-아세안 운명공동체를 건설"	2015년 11월 윈난성 징홍시에서 제1차 란창-메콩 협력 외교장관 회의 개최 2016년 3월 하이난성 산야에서 제1차 란창-메콩 협력 정상회의 개최
특징	중국 최대 규모의 종합 박람회 중국-아세안 무역투자관련 최대 행사	일본 주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GMS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중국주도의 메콩지역 협력체

자료: 저자 작성.

23) 김홍원 외(2016),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중점지역의 추진동향과 시사점」, p. 18, KIEP 지역 기초자료 16-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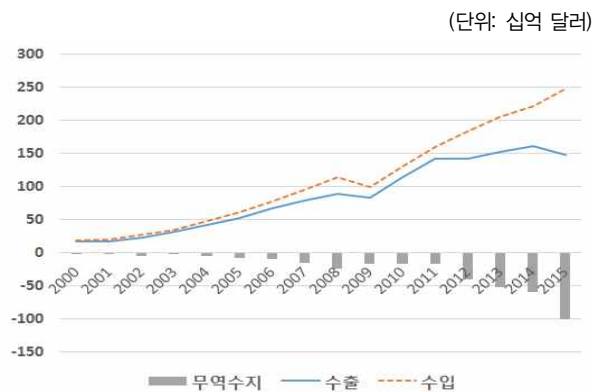
24)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3. 동남아·중국 경제관계 현황과 성과

가. 무역

- 동남아의 대중국 무역액은 2000년 350억 달러에서 2015년 3,953억 달러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²⁵⁾, 해당기간 대중국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수입 증가가 두드러졌음.
 - 동남아의 대중국 수출은 2011년 1,418억 달러를 기점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5년 1,47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 1,592억 달러였던 대중 수입액은 4년 간 55.8% 증가해 2015년 2,480억 달러를 기록함.
 - 최근 동남아의 대중국 수출에 비해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남아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2011년 174억 달러에서 2015년 1,007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음.
 - 2006년부터 2015년 10년 동안 중국-동남아 무역은 176% 증가하여 세 배 이상 늘었으며, 이는 동남아의 대세계 무역이 같은 기간 63% 증가한 것과 비교됨.
 - 2005년 발효된 중·아세안 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완전무관세 적용이 아세안 선발 6개국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CLMV국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무역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중·아세안 FTA는 선자유화(Early Harvest Program)조치를 도입하여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2006년부터 이미 관세를 철폐한 바 있음.

그림 6. 동남아 대중국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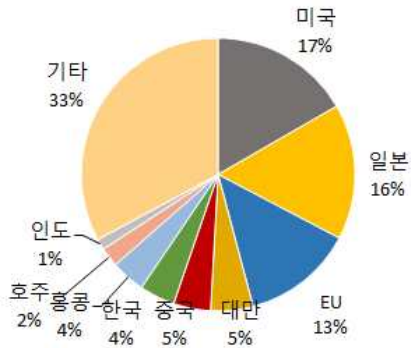


자료: IMF DOTS(검색일: 2016. 10. 21).

- 2015년 기준 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동남아 대세계교역의 17%를 차지하며 EU(10%), 미국(9.2%), 일본(8.6%), 한국(5.3%)이 그 뒤를 이음.
 - 이는 2000년 중국의 무역비중이 4%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며, 이에 비해 미국, 일본, EU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모두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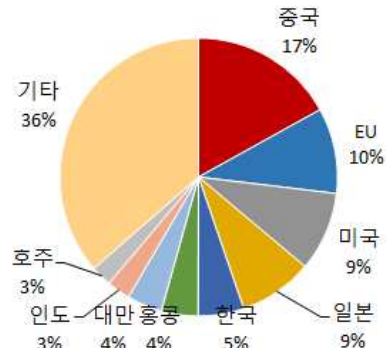
25) 동남아의 대세계 무역규모는 2000년 7,959억 달러에서 2015년 2조 3,329억 달러로 증가.

그림 7. 2000년 동남아 주요 무역 상대국



자료: IMF DOTS(검색일: 2016. 10. 21).

그림 8. 2015년 동남아 주요 무역 상대국



자료: IMF DOTS(검색일: 2016. 1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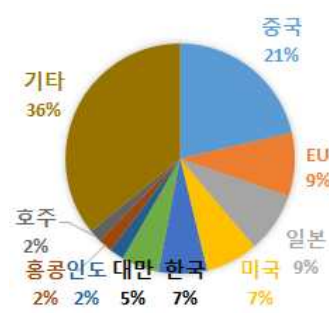
- 2015년 중국의 수출비중은 13% 정도이나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21%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음.
- o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위와 3위인 미국 및 EU와 2%p 안팎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거나 수입에서는 다른 주요 국과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9. 동남아 2015년 주요 수출 상대국



자료: IMF DOTS(접속일:2016.10.21.)

그림 10. 동남아 2015년 주요 수입 상대국



자료: IMF DOTS(접속일:2016.10.21.)

■ 2015년 동남아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주로 전기기기, 기계류와 원자재이며, 주요 수입 품목 역시 전기기기와 기계류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과 동남아에 걸쳐 형성된 동아시아 지역생산네트워크를 반영함.

- 대중국 수출품목 중 전기기기·TV·VTR과 그 부분품이 전체 수출의 38%인 720억 달러로 최대 수출품목을 차지함.²⁶⁾
- o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대중국 원자재 수출도 그 규모가 상당하나 사실상 부품소재교역이 중국·동남아 교역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음.
- 대중국 수입에서도 전기기기·TV·VTR과 그 부분품이 580억 달러로 최대 수입품목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어 기계류, 철강 등의 수출이 두드러졌음.²⁷⁾

26) 상위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의 80.5%를 차지함.

표 4. 동남아 대중국 10대 수출품목(2015년)

(단위: 십억 달러)

순위	HS코드	상품명	금액
1	85	전기기기·TV·VTR	72.0
2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19.9
3	84	보일러·기계류	19.7
4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9.3
5	40	고무와 그 제품	7.2
6	90	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5.2
7	29	유기화합물	5.1
8	15	동식물성유지	4.9
9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4.9
10	44	목재·목탄	4.2

주: HS 코드는 2 digit 기준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6. 11. 22).

표 5. 동남아 대중국 10대 수입품목(2015년)

(단위: 십억 달러)

순위	HS코드	상품명	금액
1	85	전기기기·TV·VTR	58.0
2	84	보일러·기계류	37.0
3	72	철강	13.8
4	94	가구류, 조명기구	10.1
5	73	철강제품	8.9
6	87	일반차량	8.6
7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8.5
8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8.0
9	89	선박	7.8
10	90	광학/의료 측정 및 검사 정밀기기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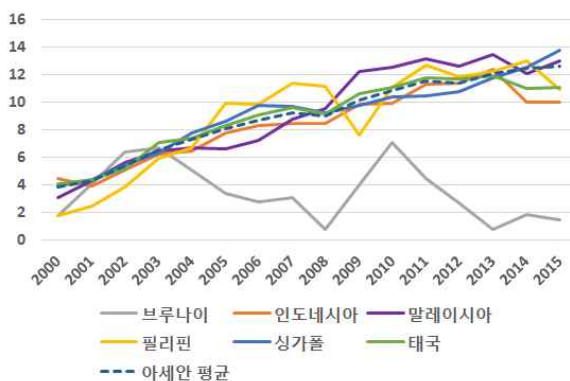
주: HS 코드는 2 digit 기준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6. 11. 22).

■ 동남아 국가들의 아세안 평균 중국 수출비중은 2000년 3.8%에서 2015년 12.6%로 약 3배 증가했으며 해당기간 아세안 선발6개국 보다 CLMV 국가들에서 중국 수출비중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6개국의 중국 수출비중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필리핀에서는 6배 이상 증가하여 아세안 선발6개국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임.
- CLMV 국가들 중에는 미얀마와 라오스의 대중국 수출비중 증가세가 두드러져 2014년 미얀마와 라오스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각각 63.0%, 34.2%에 달하였음.

그림 11. ASEAN-6 대중국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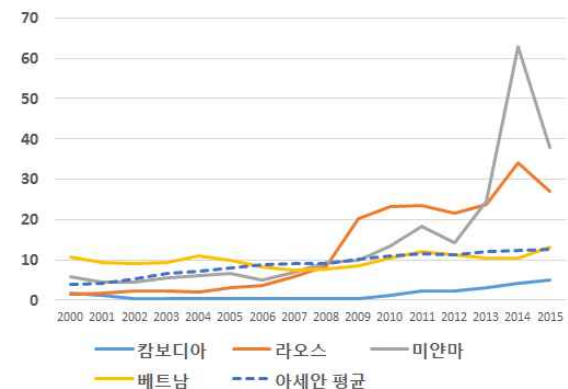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MF DOTS(검색일: 2016. 10. 21).

그림 12. CLMV 대중국 수출 비중

(단위: %)



자료: IMF DOTS(검색일: 2016. 10. 21).

- 무역상대국 순위를 보면, 캄보디아와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중국은 동남아국가들의 수출입 비중에서 1~3위의 지위를 차지함.

27)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60.3%를 차지함.

- 중국은 미얀마와 싱가포르에서는 수출시장으로서 1위, 라오스, 말레이시아에서 2위를 차지하며 수입대상국으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중국의 동남아 무역 상대국 위치

	국가	수출		수입	
		순위	비중(%)	순위	비중(%)
1	미얀마	1	37.8	1	42.1
2	싱가포르	1	13.7	1	14.2
3	라오스	2	26.9	2	18.6
4	말레이시아	2	13.0	1	18.8
5	태국	2	11.1	1	20.3
6	베트남	3	13.2	1	34.0
7	필리핀	3	10.9	1	16.2
8	인도네시아	3	10.0	1	20.6
9	캄보디아	6	5.1	2	22.2
10	브루나이	12	1.5	2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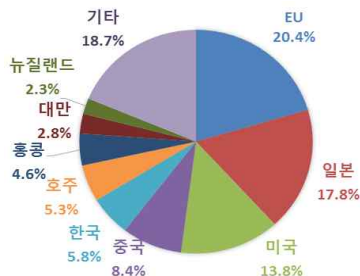
주: 수출순위, 수출비중의 순으로 정렬.
자료: IMF DOTS(검색일: 2016. 10. 21).

나. 외국인투자

■ 중국은 동남아 주요 투자국으로 EU, 미국, 일본에 비해 아직 그 비중은 낮은 편이나 투자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임대 및 상업서비스, 제조, 도소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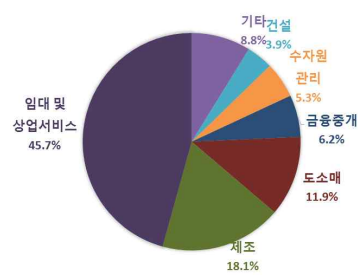
- 2015년 중국은 동남아에 82.6억 달러 투자했으며, 이는 역외국가들의 동남아 투자액의 약 8.4%임.
 - 2015년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5년 전의 3.3배, 10년 전의 44배로 급성장하고 있음.
- 중국의 동남아 최대투자 부문은 임대 및 상업서비스 부문으로 전체 동남아투자의 45.7%를 차지했으며, 이어 제조부문이 18.1%, 도소매부문이 11.9%를 차지함.
 - 임대 및 상업서비스 분야의 경우 역외금융센터(OFC: Offshore Financial Center)에 자산관리회사 등의 법인 설립의 형태가 많아 이후 다른 산업에 재투자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중국의 싱가포르 우회투자에서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13. 동남아 주요 투자국 비중(2015년)



자료: ASEAN Statistics(검색일: 2016. 11. 16).

그림 14. 중국의 동남아 투자 부문(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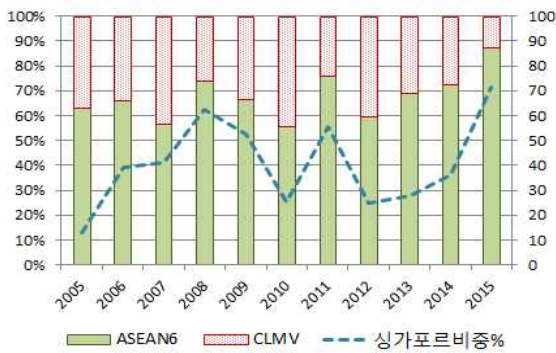


주: 임대 및 상업 서비스는 기계·장비 대여, 기업경영 및 법률 서비스, 컨설팅, 광고 및 기타를 포함.
자료: CEIC(검색일: 2016. 11. 16).

■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선발6개국(ASEAN-6)에 집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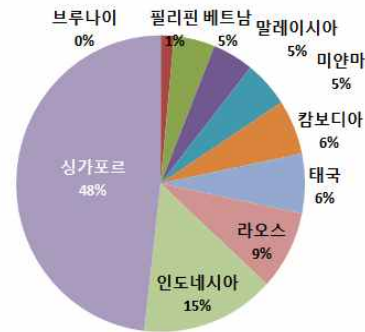
-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ASEAN-6에 대부분(60~87%) 이루어지고 있으나, 싱가포르가 우회투자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분포는 더 다각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 2016년에만 중국이 아세안 선발6개국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최근 증가세가 가속화됨.²⁸⁾
- 중국의 동남아 기업 인수합병 실적은 미미하나 2010년 이후, 2014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 5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1~15년 합계기준 싱가포르가 전체 60%, 말레이시아가 29%를 차지함.²⁹⁾

그림 15. 중국의 동남아 FDI



자료: CEIC(검색일: 2016. 11. 16).

그림 16. 중국의 동남아 투자국 분포, 2011~15년



자료: CEIC(검색일: 2016. 11. 16).

다. 중국의 동남아 개발협력

■ 중국은 투자와 원조를 포괄하는 광의의 “경제협력”의 개념으로 개발협력을 접근하고 있으며, 공공차관과 상업차관, 합작투자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거대인프라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개발원조는 순수한 개발재원이자기 보다는 상업차관과 수출신용, 투자 등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동남아 각국은 인프라 건설수요가 높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중국의 인프라 투자개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국인프라기업들은 또한 단기와 공기 측면에서 일본 등 선진국기업보다 경쟁력이 있음.
- 거대 프로젝트의 예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화디엔(华电)국제전력이 남부 수마트라에 건설중인 1,240MW 규모의 탄중 에нім(Tanjung Enim)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중국수출입은행이 1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것을 들 수 있음.³⁰⁾
- 공식통계는 없으나 AidData를 이용한 추정치에 의하면 중국은 2012년 8억 8,000만 달러의 양허성 원조를 동남아에 공여하였고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비해서는 크지 않음.
- 2008년 이후 중국의 최대 수원국은 캄보디아로 2008~2012년 약 37억 달러를 지원받아 전체 동남아 공여액의 약 72%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인도네시아, 3위는 라오스가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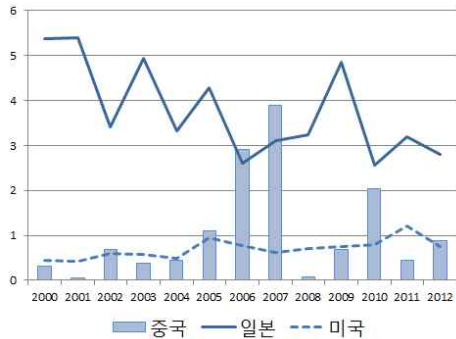
28) Credit Swisse(2016), “ASEAN’s Pivot to China-Shifting to a Fast Track.” (November 21)

29) Thomson On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30) Suzuki, Wataru, “Indonesian Coal Producer Gets \$1.2B loan from China,” *Nikkei Asia*. (2015. 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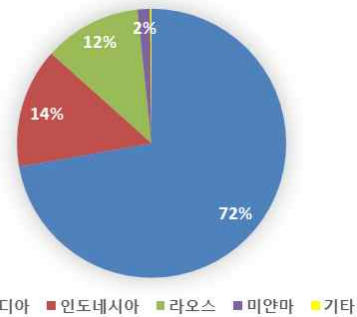
그림 17. 동남아 ODA 수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약정기준, AidData는 추정데이터.
자료: AidData, OECD DAC.

그림 18. 중국의 동남아 원조공여 현황, 2008~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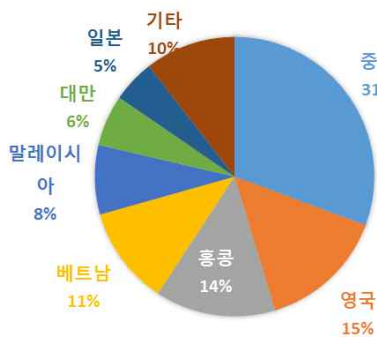


주: 약정기준, AidData는 추정데이터.
자료: AidData(검색일: 2016. 12. 2)

글상자 1. 캄보디아의 사례가 보여주는 중국투자과 개발협력의 중요성

-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친중국적 노선을 견지한다고 평가받는 국가로 정치적 요인 이외에도 투자 및 개발협력에서 매우 높은 중국의 영향력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은 의류 및 신발제품으로 선진국 의존도가 높으나, 수입, 투자 및 개발협력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고 특히 중국은 2015년 신규투자 31%를 차지하는 캄보디아 최대투자국이며, 중국의 2012년 원조공여액은 DAC 모든 회원국의 양자원조 규모를 초월함.
- 중국은 8억 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최대 세산(Sesan) 2 수력발전댐을 BOT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고, 캄보디아 최대 경제특구인 시아누크빌항 특구(Sihanoukville Port Special Economic Zone) 건설에 30억 달러를 공동투자하여 2012년 가동 이후 88개 중국기업이 입주시킨 후 현재 장쑤성 우시(無錫)와 시아노크빌의 직항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음.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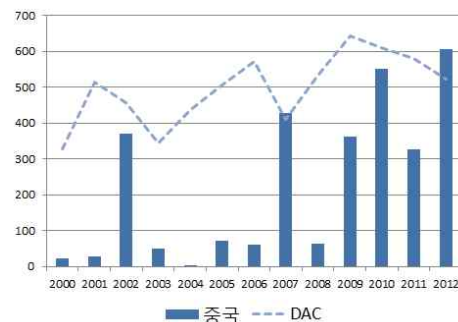
그림 19. 캄보디아 2015년 국가별 신규투자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그림 20. 중국과 DAC의 캄보디아 원조공여추이

(단위: 미 백만 달러)



주: 약정기준, 중국수치는 추정치이며 2012년까지 제공됨.
자료: AidData, OECD DAC(검색일: 2016. 12. 2)

31) AidData(2016) "Chinese Companies Invest in Sihanoukville Special Economic Zone," <http://china.aiddata.org/projects/32206>(검색일: 2016. 10. 2); "Proposed China flight to serve SEZ in Sihanoukville," *The Phnom Penh Post*. (2016. 11. 11)

5. 결론과 시사점

가. 미국의 아시아정책 변화에 따른 향후 전망

-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및 FDI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의 아시아 정책 후퇴로 중국건제가 악화될 경우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동남아 국가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TPP 무산, 통상압력 확대, 미국기업들의 해외투자 축소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출 및 FDI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음.
- 미국 신행정부는 출범 직후에는 아시아에서는 중국과의 통상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 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행정부 역시 미국의 국익 극대화 측면에서 중국의 해상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태지역에서 해군력 증강 등을 통해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현실자각에는 수개월 또는 1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³²⁾
- 중국은 미국의 공백기와 대대적인 경제협력제안을 이용하여 동남아에서 세력을 공고히 하려고 할 것이나 동남아 국가들 역시 중국이 아시아에서 견제 받지 않는 패권국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나. 아세안·중국 경제관계 평가

- 최근 중국의 동남아 전략은 일대일로 구상, 특히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건설의 틀 속에서 재편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자국 주도의 협력메커니즘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은 윈난성과 동남아 주요국을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쿤밍-싱가포르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지역협력에서도 사실상 일본 주도의 ADB와 경쟁 형태인 란창-메콩 협력메커니즘을 제안하는 등 주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교역 측면에서 동남아의 최대상대국이고 투자에서는 아직 그 비중은 미미하나 성장세는 높으며, 비전통적 원조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주요 교역품목은 전기기기와 기계류 및 부품에 집중되어 있어 동아시아에 형성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반영하고 있음.

32) 신성원(2016), 「트럼프 행정부 외교 안보 인선 동향 및 대외 정책전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50.

- 중국은 동남아 주요 투자국으로 EU, 미국, 일본에 비해 아직 그 비중은 낮은 편이나 투자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임대 및 상업서비스, 제조, 도소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중국은 투자와 원조를 포괄하는 광의의 “경제협력”의 개념으로 개발협력을 접근하고 있으며, 공공차관과 상업차관, 합작투자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거대인프라 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음.

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대응

■ 동남아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는 있으나 동남아 국가들 역시 특정 역외국가에 대한 편향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역내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균형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다각화하고자 함.
 - 2016년 7월 PCA 판결 전후에 국내 및 해외 언론에서 동남아 국가들을 반중국, 친중국 국가로 나누기도 했으나,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균형노선을 견지하고 있어 이는 적절한 분류가 아님.
- 동남아에서 ‘중국기회론’은 ‘중국위협론’과 항시적으로 공존하는 가능성이며, 이는 중국이 동남아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향후 자국의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의 결과임.
- 동남아는 현재 투자부족이 성장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기 때문에 투자여력이 큰 중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며, 만성적 인프라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이 제안하는 인프라 개발에도 관심이 많음.
- TPP 무산으로 RCEP이 중국 주도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할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으나 RCEP을 통한 무역자유화에 대해 동남아 국가들은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은 급변하는 동남아 역내외 정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별국가의 입장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진출 확대가 한국의 동남아 교역과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부상과 역내 정세 변화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대응을 국가별로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근거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친중, 친미국가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동남아에서 진행되는 미중갈등, 중일갈등이 동아시아로 확대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동남아-중국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아세안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중국의 급격한 진출 확대는 한국의 동남아 무역과 특히 투자에 경쟁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분업구조 심화로 이루어질 경우 한국에게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여 동남아 경제협력 정책에 활용해야 함. KIEP